

인터뷰 자료

1. 현 정부 들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정부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뭘 꼽겠습니까?
 -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1기, 2기 위원회가 운영되었고 2003년 12월에 참여정부에서 새로운 3기 위원회가 출범
 - 참여정부 들어 새롭게 출발한 제3기 위원회는 우선 국가의 중요한 국정과제를 세우고 추진하는 12개의 “국정과제위원회” 중 하나로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를 통하여 정책자문안을 만들어 토론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결정하는 ‘일하는 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음
 - 현재 우리 위원회가 맡은 국정과제는 6개 과제인데 ① 갈등관리시스템구축, ② 대안적 갈등관리프로세스의 적용, ③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정책 수립, ④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 구축, ⑤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 구축, ⑥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등임
 -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정부의 개발정책 수립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갈등관련 과제는 참여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로서 참여정부 들어 가장 획기적인 변화의 한 사례가 아닐까 싶음
 - 그동안 우리사회가 민주화에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익과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른 규칙과 절차를 만들고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 금년 2월에 이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한바 있으며, 앞으로 동 방안대로 갈등관리추진체계화, 법령 및 제도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오히려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임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모델 수립에 나선 문제는 한탄강댐 건설 문제죠? 논의가 꽤 진척됐을텐데 결과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 주민의 역할 또 중재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 한탄강댐은 건설교통부가 문산, 파주지역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99년 12월 수립한 수해방지종합대책(임진강특별대책포함)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02년 3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음

- 그런데 주변지역 주민들 가운데 홍수예방을 위한 댐 건설에 반대하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원도민과의 대화에서 언급
 - 우리 위원회는 금년 초부터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을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현재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한탄강댐조정회의)’를 구성해서 관련당사자간 쟁점부분을 논의해 나가고 있음
 - 한탄강댐조정회의에는 한탄강댐에 대한 찬·반 주민과 환경단체, 정부 등 4개 관련당사자 대표자들(총 14명)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위원(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조정회의를 열고 있음
 - 지금까지 총 6차례의 조정회의가 있었으며, 조정회의 운영규칙과 합의절차, 앞으로 합의가 필요한 쟁점분야(6개)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현재 한탄강댐과 관련된 기술적 쟁점들을 논의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 8월말까지는 한탄강댐 문제에 대해 관련당사자간 최종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관련당사자간 서로의 입장을 고집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협상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임
 - 만약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려 대통령께 자문안을 보고드릴 예정임
3. 정부부처 중에는 당장의 경제현황을 고민해야 하는 부처도 있죠. 건교부도 그렇고 산자부 등 경제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권고가 이런 부처와 충돌하지는 않나요?
- 우리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비전 중 하나가 ‘활력있는 경제, 높은 삶의 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위원회가 경제부처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
 -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은 이미 ‘발전’의 긍정적 의미를 인정하고 기존의 ‘발전’ 개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개념이라 생각함. 즉, 긍정적인 ‘발전’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환경’ 문제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하나의 통합체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임
 - 우리위원회의 주요 국정과제를 보면 크게 갈등관리정책, 에너지·산업정책, 물·국토·자연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 등 4개 정책분야에 6개 과제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우리위원회 내에 5개 전문위원회를 두는 한편 사무국내에 각 과제별로 담당 팀을 두고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5개 전문위원회는 사회·환경·건강, 갈등관리정책, 물·국토·자연, 에너지·산업,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등이며, 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사무국에 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이 팀에는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고 있어 이미 관계부처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음. 더욱이 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는 대통령 주재하에 관계부처의 장관들도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통해 확정되므로 의견충돌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음

-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어느 한쪽에 편협된 시각에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지속가능개발에 도움이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에 따른 전략 등을 대통령께 보고하여 이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토록 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임

4. 생각해보면 갈등해결은 사실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이뤄져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경제부처와 환경부처의 입장이 같을 순 없잖습니까? 그 점에서 정부안의 정책조정능력에 대해서 훑어본 결과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 정부 부처는 정부조직법상 각자가 맡은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갖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란 정책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이해관계, 정책효과, 재정소요, 다른 부처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복잡다기한 양상을 띠게 됨
 - 정부정책이 갖는 이와 같은 특성상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에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 차이는 부처간에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사안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있음
 - 다만, 부처간의 통상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주요한 국가정책이 표류하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국무총리실이 조정을 해 나가고 있음
 - 부처간 갈등상황의 경우는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해결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함
 - ※ 당사자간 협의·조정, 경제·교육인적자원·통일외교안보·사회 등 4대 분야별 주무부처 장관회의, 국무총리실 직접조정 등 3가지 유형의 중앙행정기관간 정책갈등 조정시스템이 있음

5. 사실 고철환 위원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맡으셨을 때 사람들이 제일 기대한 건 새만금에 대해 참여정부가 새로운 해법과 비전을 제시할 건가 하는 기대였을 겁니다. 이점에서 평가한다면?

- 새만금 간척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갯벌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았을 때 시작한 사업임. 그러나 시화호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보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문제를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짐

- 따라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가 현재 마련중인 갈등관리시스템이 새만금 문제 이전에 진작부터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음

6. 갈등 상황은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계층 갈등, 노사갈등, 환경분쟁, 이념갈등 등 정말 다양한데요. 이런 갈등에 대해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갈등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라고 판단하세요?

- 우리 사회에서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현상들은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화·다원화된 사회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형성, 시민단체의 활성화, 언론의 다변화 등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이해당사자간의 극렬한 분열과 대립으로 나타남으로써 사회통합을 해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대통령께서도 “갈등관리에 있어 키워드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진실하게 접근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조건”이라 말씀하심

- 갈등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의 사전예방이라고 생각함. 우리 위원회는 이를 위해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칭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공공사업관련 제도개선을 갈등관리 정책분야의 중점과제로 추진 중임

- 기본법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부처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후 정부입법으로 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 부여,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영향평가, 갈등관리위원회·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갈등해결을 위한 국가적인 해결기제 마련 등임

-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임

- 국토개발·이용, 환경·생태 등 7개 분야별 갈등유형 분석과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지침을 마련, 부처에 시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부처에서 실무작업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임

7. 생각하고 계신 갈등관리모형을 당장 행정수도건설 같은 문제에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의 해법이 지금 필요해지는 건가요?

- 갈등관리모형은 지금도 연구중에 있어 어떤 특정 사안에 당장 적용하기는 곤란함

- 더욱이 행정수도 건설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8.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앞으로 주목해서 풀어가려는 문제는 뭔가요? 물 문제에 이어 에너지 문제에 대해 가장 역점을 둘 계획은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의 수자원 특성을 보면, 연평균 강수량은 1,283mm로서 세계 평균의 1.3배에 달하나,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에 불과하며, 연간 전체 강수량의 70%가 여름철(6-9월)에 집중되고 계절적 하천유량의 변동이 심하여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는 등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의 부족과 비점오염 증가 및 하천유지용수의 부족 등으로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로 인해 신규 수자원 개발여건이 악화되고 지역간 물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주민·시민단체간 합의도출 체계가 미흡하고, 유역차원이 아닌 행정구역 단위의 물관리로 인해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이러한 물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물관리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수량, 수질, 재해, 갈등해소, 법제도 정비 등 분야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관리정책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에너지정책의 목표는 에너지안보 강화 및 환경친화적인 생산, 소비체계 구축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서는 에너지안정공급 및 최적 에너지믹스, 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을 들 수 있음
 -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타 정책과의 우선 순위나 추진규모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9. 일반 시민의 힘도 사실 중요해보입니다. 결국 여론의 무게중심이 갈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점에서 당부하고 싶은 점은?

- 참여정부에서 갈등해결방식의 모토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의 도출이라고 할 수 있음
 - 모든 관련당사자가 함께 모여 무엇이 쟁점인지를 구체화하고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는 당연히 다수 관련당사자들의 의사가 모아진 여론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임
- 그러나 여론의 향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

각함

- 오늘날 다원화된 미디어사회에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다수의 합리적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갈등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는 여론이 대화를 통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의 성숙이 중요하다고 생각함